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켜드려요”

도·특허청, 지식재산 나래프로그램 사업 지원규모 확대 시행

전북도와 특허청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연구성과 등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남의 손에 넘어가 막대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나래프로그램 사업'을 확대시행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13개 기업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22개 기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창업한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이나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인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1개 기업당 18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3개월 동안 특허 전문가가 맞춤형 지식재산 컨설팅을 통해 지원기업에게 가장 적

합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를 분석하여 특허출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온라인(<http://bix.ripic.org>)을 통해 신청하면 서류심사 및 기업현장 실사를 실시한 후 지원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세계 각국이 자국보유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등의 유출을 막기 위해 보호장벽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식재산 나래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특허권리 확보,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전략도출 등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보유기술 진단을 통해 강한 특허를 발굴하여 기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는 사업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신성욱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부위원장 기자회견서 김제시장 출마 선언

신성욱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부위원장은 7일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새로운 변화를 위한 김제의 재창조와 사람중심 미래 김제를 만들겠다”면서 기자회견을 갖고 6.13 김제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신성욱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철학과 시민참여 정치는 김제에서도 가장 필요한 가치”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김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신성욱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정부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김제시 변화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대외협력국·자원봉사센터·국제교류센터·공보관 소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중철)는 7일, 제350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외협력국, 자원봉사센터, 국제교류센터,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17년도 주요 성과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허남주 의원(비례)은 “정무기획과는 도의회와 협력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과장급 간부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깊이 있고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주시기”를 주문했다.

김중철 위원장(전주7)은 “연간 11억 원 이상의 홍보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홍보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평가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며, 토탈관광에 있어 14개 시군의 유명 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총괄적으로 실시하여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했다.

송지용 의원(완주)은 “농촌진흥청이 전라북도로 이전하면서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과 관련하여 중앙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과 기관 간의 교류가 지역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심도있게 고민한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를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공공데이터 통해 8655명 고용...3년간 매출 기여도 26.7%

공공기관에서 개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매출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체계적인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자 679개의 핵심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그 결과 2017년까지 총 545개 기업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이후 매출이 늘고 사업 확장이 추진해 총 8655명(기업당 15.9명)이 추가 고용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679개사에서 약 2395명(기업당 3.5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인데 이중 약 30%정도가 데이터 활용·분석 등을 위한 채용 인력이다.

또한 최근 3년간(2015~2017년) 전체 매출에서 공공데이터가 기여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약 2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에 행안부는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확대, 비용절감 및 업무효율성 증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응답해 공공데이터가 실질적인 기업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는 데이터 가공 분석 기술 인력의 부족(18.6%)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급조달(13.9%), 초기창업자금 확보(10.4%) 등 자금 관련 애로사항이 그 다음이었다.

행안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김일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데이터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해 데이터 활용 교육, 창업 지원 등을 확대할 것”이라며 “더 많은 기관, 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활용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



전북도 유통질서 확립 최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전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단속의 효율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일, 시·군 등 유관기관과 명예감시원으로 합동반을 구성, 수산물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주요 점검대상 업체는 제수용품·선물세트 생산·유통업체, 대형 마트,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등이며, 단속 대상 품목은 명절 제수용품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품목(명태,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가오리 등)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계절 성수품목(공치, 파메기, 대게 등) 일본산 수산물(참돔, 가리비, 홍어 등)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및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는 위반금액의 5배 이상 최대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고 생산지 혼란이 많아 의심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를 통하여 안전성 확인 및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도 감대근 해양수산과장은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정기적인 원산지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7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제1차 전라북도지역통합방위 회의가 전북도 통합방위협의회 회장인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열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비롯한 민·관·군·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이번 지역통합방위 회의는 북한의 강화된 핵과 미사일위협 속에서 지역안보태세를 점검 및 올해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을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한 테러대비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철저”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전주권 광역 소각시설 현장 방문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훈열)는 7일 현지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전주시 상립동에 위치한 전주권 광역 소각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현지 의정활동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등 4개 시·군에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의 소각처리 과정과 운영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환경복지위원들은 먼저 소각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생활쓰레기와 대형폐기물 등이 청소차에 실려 반입된 후 선별과정을 거쳐 소각되는 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어 중앙제어실을 방문,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되는 지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봤다.

이날 전주권 광역 소각시설을 둘러본 최훈열 위원장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화두인 오늘날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어우러질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권 광역 소각시설은 사업비 1,142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2006년 9월부터 2대의 소각로에 1일 최대 400톤 소각이 가능하며, 소각열은 우선 산단기업에 공급 후 자체 소각공정과 주민편익시설 등에 이용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